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02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5년 10월 26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노동개혁, 총궐기로 막는다!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3일 서울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포장해왔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들은 구조개혁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23일 서울에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결기가 동시에 들어 있었다.

월급 도둑질, 살인 면허제, 평생 노예계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이렇게 표현했다. “임금피크제는 월급 도둑질, 일반해고제는 살인 면허제, 청년고용은 노예계약, 평생 비정규직” 이미 해고가 일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최저임금이라 임금피크제는 하고싶어도 할 수도 없다.

이런데도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한다고 우기고 있다. 정규직의 임금을 깎고, 일반해고를 자유롭게 만들면 기업들이 청년들을 신규채용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광고한다.

재벌들은 공간에 700조원을 쌓아놓고 있는데 노동자 임금 깎아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파렴치해도 너무 파렴치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재벌들은 그동안 어떻게 비정규직을 착취해서 끝없는 이윤을 만들어왔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자본에게 더 큰 무기를 쥐어주는 노동시장 개혁은 결국 노동자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것이다.

민중총궐기로 반격한다!

올해 민주노총의 투쟁이 노동시장 개혁을 계속해서 늦춰왔다. 상반기 내에 마무리 짓겠다던 박근혜 정부도 하반기까지 밀리자 강행하겠다고 돌파구를 만들고 있다. 올해 민주노총의 투쟁은 전체 민중의 단결을 만들어왔다. 그 결과, 11월 14일 전국적인 민중총궐기가 준비되고 있다. 대전지역은 10월 14일 지역 민중대회를 진행했고, 충북지역은 10월 30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지역 민중대회를 연다. 지역별로 모아진 힘을 11월 14일 하나로 모아 서울에서 대규모 민중총궐기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와의 끝장투쟁이 다가온다. 마음 단단히 먹고 투쟁을 준비하자!

낮은 임금!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총궐기로 저지하자!

체불임금 받기 전에는 안내려온다!

피엘에이지회 조합원 25명이 19일 서울본사에 올라갔다. 4월부터 체불 중인 임금을 받기 위해서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회사는 답변이 없다. 그저 노력하겠다는 공허한 소리만 들려온다.

피엘에이 대표이사는 대전노동청장의 중재로 체불임금 확인서를 두차례나 작성하고도 여전히 체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김국배 지회장은 “10월17일 유상증자를 했다. 120억 원이 들어왔지만 한 달 동안 묶여 쓸 수 없는 돈이라고 또 말을 바꿨다. 교섭에서 한 얘기인데 지키지 않는다. 조합원들은 회사를 믿지 못한다”며 거짓말만 일삼는 회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본사에서 회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조합원들은 체불임금 해결과 더불어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구조조정 이후 대전공장의 LCD 재생사업을 위한 영업은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노조 말살, 노예 노동 불러올 “저성과자 해고”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안 중 이것 하나만으로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노예노동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일반해고제(= 저성과자 해고제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 [일반해고 요건 완화]
일반적인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주요내용] ①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 ② 교정기회 부여 직무 전환 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 ③ 공정한 절차와 관련 내부 규정 운영

해고라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가장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을 예측한 정부는 국회 법안상정이 아닌 “지침- 가이드라인”이라는 형식을 빌어 현장에 약한 고리부터 야금야금 파고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충실한 대변자로 나선 한국노총은 9.13 노사정 야합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간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9.13노사정 야합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노사정은 인력운영 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 개선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평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단지 해고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전반, 즉 채용, 배치전환, 승진, 해고에 이르기 까지 성과주의 인사평가에 기초한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이고 지침(가이드라인)에 머무르지 않고 법제도 개정을 위한 물꼬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성과자 해고 절차는 [개인 업무 평가] ➡ 하위등급 [교정기회 부여(교육, 배치전환)] ➡ [개선이 않될 시 해고] 이 절차만 거치면 정당한 해고로 간주됩니다.

저들이 말하는 “공정한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은 그야말로 해고를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안돼요

민주노총

맘대로 해고
노동개혁